동반성장지수 대기업 불공정거래 '면죄부'

조배숙 의원, 최근 5년간 평가대상기업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434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는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실태가 심각하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익산을·사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00개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 대기업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을 취합, 분석한 결과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2018년 37건, 총 4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348건, 하도급법 위반 43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22건, 표시광고법 위반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건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위반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기업별로는 코오롱글로벌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각각 20건, 대림산업, LS산전, SK건설 17건, 현대산업개발 16건,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14건, 삼성물산 12건, 롯데건설, 가온전선 10건 등의 순이다.

한편, 2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한 코오롱글로벌의 경우 2017년 동반성장지수평가(2018. 6. 27 공표)에서 '양호' 등급, 17건을 위반한 SK건설, 14건을 위반한 포스코건설 등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우수' 등급을 받은 LS산전의 경우 2018년 10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은 "여전히 동반성장지수가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유은혜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지난 12일 전북도 과학교육원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유은혜 부총리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포함한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맞손을 잡고 있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은 이자리에서 "교육도 감동을 주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유익한 자리, 서로 웃으면서 의견 주고받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북미정상, 비핵화 시간표 통 크게 합의했으면"

문 대통령, 英 BBC 유럽순방 사전 인터뷰서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지난 12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속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임 테이블(시간표)에 대해서 양쪽 정상들이 통 크게 합의를 했으면 하는 기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국 BBC 방송과의 유럽순방 사전 인터뷰에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되는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북미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프로세스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강한 낙관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는 일정한 단계까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제재 공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국제적인 제재의 틀 속에서 그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북한에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준비 중인데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어떻게 풀어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이 제재가 풀리거나 또는 제재에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예외적인 조치로 용인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라면서도 "본격적인 경제 협력은 그 제재의 완화에 따르되, 그때까지 경제 협력을 위한 사전 준비들을 미리 해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동 조사, 공동 연구, 또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협의들이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사전 준비들과 관련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옳은 선택을 할 경우에 경제적인 번영이나 아주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력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며 "자신들의 체제만 보장된다면 자신들이 제재라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추가적인 핵실험과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핵을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전시키는 시설들을 폐기한다는 것과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들을 전부 없애겠다는 것 등 전부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는 북미 간 협의해야 될 내용"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협상 파트너로서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나름대로 독특한 스타일들이 있지만 서로 결단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의 남북 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프로세스가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실무적으로 그 타임 테이블을 두고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크게는 완전한 비핵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나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의 큰 결단 덕분"이라며 "두 분의 결단이 없었다면 비핵화 문제를 이렇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낸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뉴시스

교육부, 내일 전북대서 내년 예산안 현장 설명회

교육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6일 오후 3시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2019년 예산안 현장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교육부 주요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나서 내년 정부와 교육부의 예산안 주요 내용과 국립대 재정지원, 대학 재정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과 전문대 재정지원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대학과 출연기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차량 도심속도 10km/h 낮춰도 통행시간 큰 차이없어

교통안전공 전북본부, 전주역-원당교차로 등 구간서 측정 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는 전주시와 전주완산경찰서 협업으로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른 통행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주행속도에 따른 통행시간을 측정하는 실증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주역-원당교차로, 조촌교차로-안적교삼거리 2개 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와, 교통량이 적은 점심시간대와 야간시간대에 각각 시속 50km/h, 60km/h로 동시에 주행했을 때의 시간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사, 운수회사 관계자 및 일반시민 등 참관인도 차량별로 2명씩 배치하여 실증 과정을 참관토록 했다.

조사결과 20~30분 걸리는 2개 구간 주행에 평균 2분 34초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실제 조사 시 전주역에서 원당교차로에 이르는 약 13km구간의 경우 출근시간대에는 시속 60km/h로 주행했을 때 26분 10초, 시속 50km/h로 주행 했을 때 26분 44초로 차이는 34초에 불과했다.

이밖에, 원당교차로에서 전주역으로 주행 할 경우 양 속도 간 소요시간 차이는 1분 57초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적은 낮시간과 야간시간에도 차이가 불과 1분 52초로 제한속도를 낮춰도 도심 교통체증 유발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 피해는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다. 아일랜드 속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자 가능성을 실험한 결과 50km/h에서는 55%였으나 60km/h에서는 8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캐나다 위니펙시 경찰의 차량속도별 제동거리 실험결과 60km/h로 달리던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27m였으나, 50km/h에서는 제동거리가 18m였다. 속도를 10km/h만 줄여도 제동거리가 2배이상 짧아진다.

송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은 "정부의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 정책은 도심지역 주행속도를 줄여 제동거리 단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을 낮추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이다"며"시민들이 속도하향의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송효철 기자